광주지하철 부실운영 질타·산하기관 비정규직 해소 촉구

並 국감 초점 광주시·광주경찰청

'세월오월' 전시 논란 여야 공방 달빛동맹 강화 영호남 교류 주문 정부 비방 낙서 과잉 수사 비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6일 광주시와 광주지방 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 감사를 열고 광주도시철도 부실 운영과 마구잡이식 수사 방식 등을 집중 질타 했다.

◇광주시=국감 의원들은 광주지하철(도시철 도) 1호선 운영 부실과 산하 기관 비정규직 문제 등 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해 논란이 된 홍 성담 화백의 걸개그림 '세월오월'의 광주 비엔날레 전시 논란과 관련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각각 '저급 한 노이즈 마케팅'과 '광주정신 훼손'을 주장하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은 또 영호남 상생발전 사업을 통한 동서화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2015광주유니 버시아드 대회, 2019세계수영선수권 대회 등 각종 현안 사업의 성공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감에서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광주도시철도 1호선 의 만성적자 문제 등을 비판했다. 강 의원은 "광주 도시철도의 적자는 심각하다. 공짜승객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32.4%에 이르다 보니 무임승차 손실액만 연간 70억원이 넘는다"면서 "수요예측을 과다하게 분석해 도시철도를 만든 것이 원인이다. 당시 용역



16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장현 광주시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

기간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담당 공무원들도 책임 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승용 의원은 "광주도시철도의 각 역을 민간에 위탁하는 위탁역장제를 통해 일부 퇴직공무 원들에게 역장을 맡기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관피 아(관료+마피아) 사례로, 비전문가의 역 운영에 따 른 시민의 안전이 염려스럽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최근 도시철도에서 두 차례나 지연사고가 났는데, 문제는 복구에만 50 여분이나 걸렸고, 사고 현장도착도 10분이나 걸렸 다는 점"이라며 "이는 조직개편이라는 명분으로 중간역의 안전인력을 없앴기 때문이다. 사고 현장 에 빨리 도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직원들에게 택시 비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답변을 듣고 웃음마저 나 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도시철도의 경우 청소노동자 회사 가 1년씩 한번 씩 바뀌는 등 열악한 채용 조건에 있 다. 광주제2순환도로는 수납업무 노동자의 임금이 소속 회사에 따라 요금소마다 다르다"며 공공기관 내 간접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 시장은 "4년 내에 시 산하 기관의 비 정규직을 정규직화할 계획이며, 최근에는 무기계약 직도 공무직으로 전환했다"고 답변했다.

의원들은 이날 광주와 대구의 달빛동맹을 통한 영호남 교류 사업의 강화 등도 촉구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영호남, 즉 동서화합이 필수적인데도 영 남과 호남을 잇는 길이 없다. 비행기 노선도 지난 2011년 이후 끊겼고, 대구에서 광주까지 기차로만

4시간50분이 걸린다. 우리나라에 남북축만 있고 동 서축은 없다"면서 "윤 시장께서 영호남 상생을 위 해 적극 노력하시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세월오월' 전시 유보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재연 의원은 "'세월오월'의 전시 유보는 민주· 인권·평화라는 '광주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 했으며,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은 "세월오월의 작가 는 특정 대선 후보를 저급하게 모욕한 작품을 제작한 사례가 있다. 이런 작가를 배치한 것 자체가 문제다. 전형적인 저급한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맞받았다.

◇광주경찰청=수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마구잡 이로 수집하는 경찰의 무책임한 수사 방식과 심각

한 성범죄에 대한 부실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광주가 인구

1000명당 성범죄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을 꼬집으며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성폭력을 4대악으로 규정해 단속에 총력을 쏟았는데도, 인구 1000명당 발생건수가 2.4 건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중에서 가장 높은데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도대체 뭐하는 것이

경찰의 마구잡이식 수사 방식에 대한 비판도 쏟 아졌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지난 3월 광주 도심 외벽에 쓰인 정부비방 낙서 사건 수사와 관련, "30~50대 남성 기초생활수급자 2968명 명단을 구 청에서 제출받은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 · 인권침해" 라며 무책임한 수사 방식의 문제점을 따졌다.

>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국감 이색제안 2제

"상무대 '전두환 범종' 아직도 울려 …녹여 없애야"

강창일 의원

16일 광주시 국정감사장에 서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 원은 "2006년 광주 5·18공원 에서 철거된 전두환 범종이 광 주 인근 군 법당에 그대로 남 아있다"면서 "'대통령 전두환

각하'라는 글씨가 그대로 남아 있는 이 종은 광주에 서 불과 30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 장성군 상무대 내 군 사찰에서 9년 동안이나 울리고 있다"고 밝혔다. 전두환 범종은 1981년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소재 상무대를 방문해 군 법당 법무사에 자신 의 이름을 새겨 기증한 범종이다.

강 의원은 "내란죄 및 반란죄로 국가의 단죄를 받은 전두환의 범종이 광주 인근에서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라면서 "국방부 장관에게 반환을 요구하고, 5·18 기록관에 맡겨 역사 의 교훈으로 삼거나 철거 후 녹여없애는 방안 등 빠른 시일 내 후속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장현 광주시장은 "최근 이 같은 사실 을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 국방부에 폐기를 요청하 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황인자 의원

"광주시가 국비를 확보하 려면 새누리당의 이정현 의원 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16일 광주시에 대한 국정감 사에서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 이 윤장현 광주시장에게 '이

정현 의원 사용법'을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황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광주시의 재정건전 성 확보를 위해 국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야한다" 고 주장하면서 호남의 유일한 새누리당 지역구 국

회의원인 이정현 최고위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가뜩이나 지방재정이 어려운 광주시가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비확보가 우 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이를 위해 윤 시장이 국감 직후 이정현 의원 을 찾아가 '도움을 청할 것'을 주문했다. 국감 직후 시작될 국회의 2015년도 정부예산안 심사에 앞서 각 부처별 국비 요청사업 조서를 가지고 이 의원을 찾아가 이해를 구하고 도움을 청하라는 것이다. 그 러면서 황 의원은 "윤 시장뿐 아니라 전남지사와 전 북지사도 '이정현 사용법'을 공유해 호남의 예산폭 탄을 현실화시키라"고 조언했다. /최권일기자 cki@

"광주시 국비확보 이정현 의원 잘 이용하세요"



서민 증세 질타·실버존 확대·호남 소외 비판 철저한 분석·적절한 대안 제시 피감기관 진땀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진입한 가운데 새정치민주 연합 주승용 의원(여수 을)이 피감기관에 대한 철 저한 분석과 적절한 정책 제안으로 중진의 내공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주 의원은 지난 7일 안전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에서 담뱃값과 주민세 인상에 대한 정부 추계의 문 제점을 조목 조목 지적하며 서민 증세를 통한 세수 확보를 감추기 위한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 안행

부 관계자들이 진땀을 흘리게 했다. 이와 함께, 주 의원은 해마다 노인 교통사고가 늘 고 있다며 '실버존'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 시의

적절한 정책 대안이었다는 호평을 받기도 했다. 8일 소방방재청 국감에서는 사회 전반의 안전 강 화를 위해 소방공무원의 인력 증원을 촉구하는 한 편 소방 장비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 은 모순이라며 정부의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13일 경찰청 국감에서는 도 로교통공단의 임원이 100% 경찰 출신인 '경피아' 천국이 라고 질타하며 근절 대책과 함께 전문성 강화 방안을 촉 구, 경찰청 관계자들의 고개 를 떨구게 했다.

서울시청에 대한 14일 국감

에서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싱크 홀 방지 를 위한 물 순환체계 정립 및 지하지도 제작을 주문, 비판을 넘어 대안을 제시하는 중진의 경륜을 보여줬 다는 호평을 받았다.

16일 광주시청과 광주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도 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에서 소외받고 있는 광주·전남의 현실을 그래픽과 표 등을 동원해 비판하는가 하면 광주 상하수도의 낙후도와 관리 부 실 등을 조목조목 지적해 관련 공무원들이 바짝 긴 장하기도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